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1.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도적 인프라
확충 / 1
2. 남북간 협력사업 활성화 / 2
3. 대북 보건의료지원 강화 / 5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교류·협력의 기본원칙

- 보건의료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
 - **통일정책적 기초**: 통일 전 단계에서의 남북한간 보건의료 수준 격차 해소를 통해 통일에 따르는 비용 절감 도모
 - **상호이익 보장**: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하여 상호이익을 취할 수 있는 보건산업부문에서 협력사업 추진
 - **인도주의적 입장**: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남·북한간 상호신뢰 구축과 한민족 공동체 의식 제고

1.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도적 인프라 확충

민간·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류·협력 활동을 조직화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단계별 목표와 우선 순위를 설정하며, 교류·협력 주체간 조정·협조 증대

□ 지원·협력의 우선 순위와 목표 설정

-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협력 분야의 우선 순위, 의약품·시설·장비 등의 소요량 등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지원·협력 목표와 계획 수립

- 특히 유아들에 대한 영양공급, 임산부 건강관리, 만성질환·법정 전염병·결핵·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병예방을 위한 지원에 우선 순위 부여
- 단계별 지원·협력 목표와 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방안 마련, 민간의 참여 유도, 민간의 대북 지원·협력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추진
- 민간단체 등의 경우 대북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측의 책임성 있는 접촉 창구를 찾는 데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 마련

□ 대북 지원·협력 주체간의 조정·협조 증진

-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분야의 지원·협력이 정부, 국제기구, 각종 민간단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북 지원·협력 주체간의 합리적 분담을 위한 협력·조정 기능 강화 필요
-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 관련 정부부처 등으로 가칭 「대북지원·협력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업무 협의·조정 추진
-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했던 대북 지원·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의 정보를 관련 민간단체 등과 공유 필요
-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관련단체 등이 추진했던 지원·협력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거나, 타 관련단체 등이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반복하는 사례 예방 필요
- 정부내 관련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부당국자간 남북 회담 등에 보건의료분야의 Agenda 포함 필요

-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경제협력분야에서와 같이 당국자간 「보건의료협정」 체결 등의 방안 강구
- 별도의 「보건의료협정」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타 부문의 협정·합의 등에 보건의료부문 포함

2. 남북간 협력사업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식품 등 보건산업 부문의 남북 합작투자사업 활성화 및 교역 증대, 공동 연구 및 공동 역학조사 등 추진

□ 가칭 「남북협력병원」 설립·운영

- － 북한의 특정지역에 「남북협력병원」(가칭)을 설립하여 북한의료인과 공동으로 진료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료기술 전수 등 도모
 - 남북협력 병원은 평양 등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하되, 우선 1~2개의 병원을 먼저 설립·운영한 후 병원운영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거쳐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 필요
 - 남북협력병원에 의료장비·의약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북한 의료인과 남한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진료 및 병원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북한의료인이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
 - 남북협력병원에 근무할 남한측 의사인력은 volunteer를 중심으로 확보하고, 간호사·의료기사 등은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병원설립은 북한측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민간법인 등이 주관하여 설립하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 담당

□ 보건산업부문의 대북 투자 확대

- － 일반 경제협력 분야와 연계하여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민간 보건산업부문의 대북 투자 확대
 - 특히 고임금 구조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노동집약적 보건산업부문 즉, 중저가 전자의료기기 분야, generic 의약품 제조, 식품 가공 등의 대북 투자 확대
 - 북한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료기기·가공식품 등 생산품의 일부는 현지 대북 지원용으로 활용

□ 한약재 교역 확대 및 계약재배 추진

- － 현재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약재 대신 북한의 한약재를 반입하고, 특정 품종의 한약재를 북한측과 계약재배 추진
 - 중국과의 가격경쟁 등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포기한 한약재에 대해 품종 보존, 안정적 물량 확보 등의 차원에서 계약 재배 등 적극 추진 필요
 - 북한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 한약재를 발굴하고, 북한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민간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대단위 한약재 재배·가공 단지 조성 방안 강구

□ 보건의료분야 공동연구 및 전염병 역학조사 추진

- － DMZ의 말라리아, 광견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이를 위해 개성 등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 고려

- 남북한 보건당국의 협조 하에 관련학회, 민간법인 등의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한의·약 분야의 공동연구와 한약재 자원조사를 추진하는 등 남북간 학술교류와 인력교류 확대
 - 북한에서 사용되던 전통비방의 발굴·확산 및 제제화, 북한 또는 남한에서의 한의·약박람회 공동 개최 등 추진
 - 만성질환, 난치성질환 치료기술 및 치료약 개발 등을 위한 R&D 공동 수행

3. 대북 보건의료지원 강화

식량, 기초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지원은 사회복지단체, 제약회사, 보건의료인 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이를 조직화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 의약품 및 의료시설·장비 지원 확대

- 결핵 등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 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약 및 영양제 등 지원 확대
- 특히 임산부의 경우 영양결핍으로 인한 빈혈 및 각종 전염병 감염 등으로 사산·유산·저체중아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으므로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지원에 우선 순위 부여
- 의료장비를 지원하더라도 전기부족 등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자체 발전장비, 유류 등과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전염병 예방 체계 구축

- 결핵·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확대에 의한 인적·물적 접촉 증가와 함께 남한지역에 대한 방역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북한의 결핵병원(13개소)이나 결핵요양소(60개)에 대한 안정적 의약품 공급 및 기술지원과 홍수 등 자연재해 이후의 긴급 구호·방역 활동 실시

□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실태 및 자원조사 실시

-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과 보건의료 자원 등에 대해 국지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보건당국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실태 및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북 지원·협력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현장조사는 북한 보건당국이 실시하고,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등 기술적 지원은 WHO 등 국제기구가 담당하며, 조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남한측과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실시

-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의 지속적인 보급과 함께, 북한의료 인력들의 낙후된 의료기술 수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추진

- 보건·의료부문의 북한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남한측의 faculty를 파견하여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 강구
- 교육·훈련의 내용으로는 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우선순위 부여

☐ 지원의 수혜자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북한 주민이 지원의 실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을 통해 확인·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련 필요